



Global Goings-on

뉴질랜드

건강식품 구입을 유도하는 할인판매

많은 선진국들의 비만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식품 선택을 개선할 필요도 높아짐.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클리오나 니 머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식품가격의 할인과 식품의 영양에 대한 교육이라는 두 가지 전략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있는 대형마트 여덟 곳에서 6개월에 걸친 실험을 실시

1,104명의 고객 중 건강식품 할인을 받을 고객, 영양교육을 받을 고객, 둘 모두를 받을 고객, 그리고 이 중 아무 것도 받지 않을 고객을 무작위로 선정; 건강식품 할인을 받을 고객에겐 원래 가격보다 12.5% 싼 가격을 제시; 영양교육을 받을 고객에겐 각 식품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매달 배송; 바코드 스캐너로 연구와 관련된 상품의 구입을 모두 추적함.

그 결과, 통곡물, 당근, 바나나와 같은 건강식품의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 할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식품의 구입이 늘어남

미국임상영양저널(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6개월의 개입 결과, 할인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 비해 할인을 받은 고객들이 매주 약 790 그램 이상의 건강식품을 구입함; 이는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보다 구입량이 11% 증가한 것이며 연구 이전에 비해 과일과 야채를 매 주 480 그램 이상 구입함. 연구가 끝난 지 6개월 후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연구 직전에 비해 구입량의 차이가 약 380 그램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의미 있는 차이임.

영양교육이 식품 선택의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는 이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연구들과는 상반됨; 연구진은 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영양과 건강에 비교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교육의 영향이 낮았던 것으로 여김.

전통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권장하기 위해 올바른 영양에 대한 교육을 주로 활용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에만 의존하기 보단 규정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

건강식품의 가격을 낮추는 규정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건강식품에 대한 감면 등이 가격인하의 한 방법이 될 듯; 이 외에도 건강식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 저소득 인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식품산업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의 건강식품 생산도 옵션.

February 4, 2010 / China Daily

〈원문링크: http://www.chinadaily.com.cn/life/2010-02/04/content_9425591.htm〉

일본

노인학대 증가, 의도치 않은 경우도 많아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노인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무엇이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호인지를 모르고 있음.

일본 보건노동후생성에 따르면 2008년 가족

에 의한 노인학대로 신고된 21,692건 중 학대로 판정 받은 것은 14,889건으로 2007년보다 12% 증가함.

- 신체적 학대 64%
- 심리적 학대 38%
- 경제적 학대 26%
- 노인보호 무시 27%

2008년도 일본에는 3,976군데의 노인학대상담소가 있었음.

- 상담소 직원들은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학대가 인정되면 학대 받은 노인을 지역 병원으로 후송, 필요 시 환자와 가족들을 격리하기도 하고 노인을 시설로 보냄.

2006년에 발표된 노인학대방지법에 따르면 당국은 감사를 통해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학대를 조사하여 경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음.

노인의 승인 없이 노인의 연금, 저축, 기타 자산을 친척이 유용하는 형태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렇게 노인의 돈을 착취하는 친척은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잘못된 일로 생각지도 않음.

- 특히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재정을 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노인학대예방연구원의 키노쿠 나카사키 씨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함.

-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노인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배울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홍보지 등의 수단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 계몽을 선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야 할 것임.
- 노인이 학대를 받을 때 의사이든 친구이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함.

2010년 1월 30일 / The Japan Times

〈원문링크: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nn20100130f1.html>〉

호 주

처방권을 주장하는 약사들

호주에서 가장 큰 약사 단체가 개업의들의 부담을 줄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호주 내 18,000명 약사의 75%가 회원인 호주 약사협회(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는 협회 회원들 중 일부가 오늘날의 복잡한 약의 조합에 대해 개업의들보다 더 많이 알만큼 고도의 교육을 받는다고 주장.

많은 약사들이 변경된 규정으로 직장인들에

게 병가진단서(sick note)를 쓸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를 꺼려한다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호주약사협회는 약사들의 처방 허가를 위한 연구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예산 요청서 제출.

- 본 요청서에는 약사들이 천식, 당뇨, 흡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환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약사들을 교육하는 4년 프로그램에 미화 2억9천4백만 달러를 지출할 것도 요청.

호주약사협회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약국 조합(The Pharmacy Guild)은 약국 소유주들의 단체로서 약사들이 의사와 동등한 처방을 내리고 환자들에게 다양한 저위험 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제기 중.

호주약사협회의 회장인 워윅 플린킷씨는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약을 처방한 약사들이 약을 조제할 수는 없도록 하여 이들이 처방전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

- 처방은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만 내릴 수 있도록 함.
- 이미 일부 약사들은 요양원 등의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처방약을 검토하도록 요청 받고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질병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환자들의 처방약을 검토하고 있음.

협회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환자들의 처방전 발급수가 40% 증가했으며 2006년~2007

년 조사 결과 환자들이 의원을 내원한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처방전 때문임을 밝힘.

호주왕립의대(the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크리스 미첼 학장은 일부 약이 여러 의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약사들이 환

자들의 병력을 항상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고.

2010년 2월 18일 / The Australian

〈원문 링크: <http://www.theaustralian.com.au/news/nation/pharmacists-look-right-to-prescribe/story-e6frg6nf-1225831548644>〉